"이제는 국민 통합…경제회복·좌우없는 리더십 기대

"성평등 가족부 제대로 일하도록 힘 실어줘야"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아닌 확대와 강화로 나아가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 로 확대·강화된다.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부처의 권한이 다른 중앙부처 못지 않게 권한이 강화돼 성평등가족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성평등 정책 강화와 보편적 가치 교육이 필요한 만큼 성평등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의무화해야 하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다시 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과 남성의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 때 여성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띄게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가 표명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며,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 시급하지만 이 역시 국민통합이라는 기반하에 진행돼야 한다. 청소년과 청년이 갈라치기 하지 않고 상호·존중·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가책임 농정 실현·양곡관리법 통과 기대감"

윤일권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지난 정부에서는 1년에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해 쌀값이 폭락했고 양곡관리법 등 농민들이 목소리를 담은 법을 4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농촌 평균 연령이 69세이고 40대 청년 농부는 겨우 0.1%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며 돈을 벌지 못해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농촌에 농사할 농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처럼 농민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수매제·변동직불금 등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제정해야 하고 지난 정부에서 막힌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먹거리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국민 주권과도 밀접하다. 그런 만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쌀 가격 보장과 더불어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친농업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농업·농촌의 가치 국가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박시영 농협광주본부 경영기획단 과장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 사회에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 역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욱 주목받아야 할 중요한 분야다. 농업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며, 농촌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농업 예산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강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교육·창업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현충탑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합의 리더십·민생 잘 살피는 대통령 되길"

강수훈 광주시의원

이번 대선은 한밤 중에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 붕괴를 시도했던 불법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였다.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누구와도 함께 동행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념과 지역, 세대의 벽을 허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민생을 잘 살펴야 한다. 경제적 불안과 일상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어떤 비판도 담대하게 포용하는 큰 그릇을 가진 대통령,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큰 귀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기후 위기, 인공지능, 인구 감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 변화들이 이미 눈앞에 와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보화 선진국의 비전을 내놓았던 것처럼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체육 거버넌스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체육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 전반에 분열과 혐오가 확산되고,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려야 할 시기에는 '정의' 와 '대통합' 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로서 체육만 한 것도 없다.

특히 지역에서의 체육은 단순한 경기력 향상을 넘어 주민 건강과 교육, 경제, 지역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체육회 민선체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지방 체육 현장은 여전히 재정 자립의 어려움, 낙후된 인프라, 지도자 인건비 문제, 학생 선수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체육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체육회 민선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자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육 정책이 지역 체육회 주도로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지원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시·도, 시·군·구체육회가 독립법인인 만큼 재정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지방 체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체육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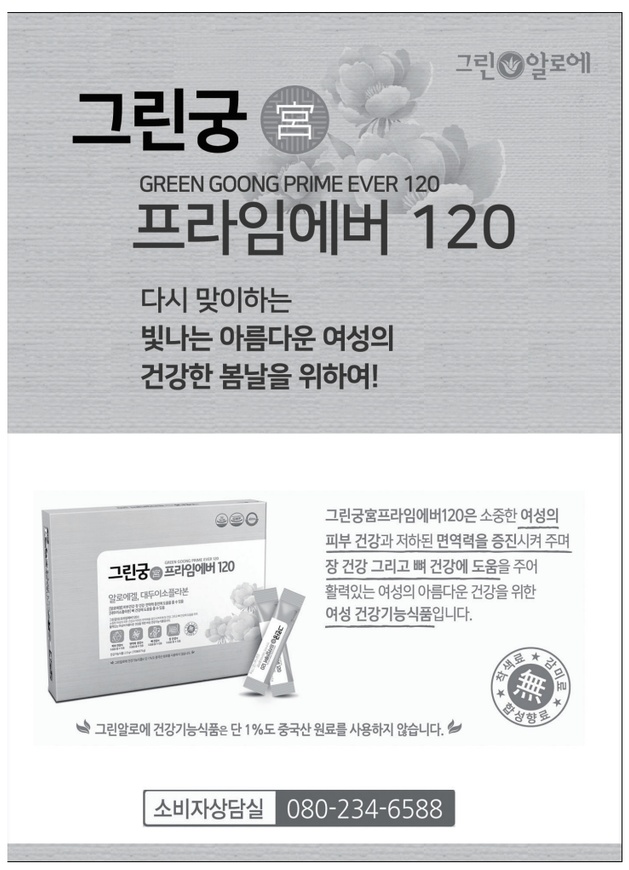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건강한 미래를 여는 힘이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느단255 상속한정승인
공고인(청구인) : 김천두, 김현화
피상속인 : 망 김영 (491210-1＊＊＊＊＊＊, 2025년 3월 20일 사망)
최후주소 :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106동 405호 (대림아파트)

법정상속인 김천두, 김현화의 피상속인 망 김영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5년 5월 26일자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25년 5월 29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공고인(청구인) : 김천두 (010-3636-5247)
채권신고장소 : 순천시 왕지3길 55, 107동 501호 (왕지동, 두산위브아파트)

전매광고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